

내 데이터는 나의 것 데이터 주권

권오현 계간 스펙트럼 편집자

지금 세계는 데이터 전쟁 중이다. 2024년 4월, 미국 의회는 중국이 소유한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강제 매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내세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틱톡이 무단으로 수집하는 미국의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이에 발맞춰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런 미국조차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AI 시대에 ‘데이터 주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예증이다.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이란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받듯이,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이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성되고 보관되는 데이터는 그 국가에서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리킨다.

데이터 주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데이터가 가진 근본적 성질에서 비롯된다. 데이터는 국경에 구애되지 않는 탈영토적인 정보다. 정부가 제한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자유로이 국경을 넘어 퍼진다. 구글(Google), 아마존(Amazon)같은 초국적 거대 기업의 부상, 최근 오픈AI(OpenAI) 같은 AI 기업의 대두는 전 세계 인구가 생산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덕분이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용인하는 국가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공짜로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면서도 자국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막는 국가는 사실상 남의 데이터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이에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나서면서, 국경이 없었던 데이터 개방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및 기타 50개 이상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기관, 기업이 생산하는 디지털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주권 문제에는 국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경제적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 주권 문제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국가와 관련한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인 데이터, 전자상거래 데이터처럼 개인이 생산한 특정 유형 데이터의 이전과 사용에 관해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 데이터, 기술 데이터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데이터의 국경 밖 이전을 규제하는 것이다. 2018년 EU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롭게 개정해 실시한 GDPR(일반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서 개인정보 리 보장을 위한 하나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GDPR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 내 거주하는 정보 주체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EU 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GDPR이 적용된다. IP 주소, 쿠키, RFID 등을 온라인 식별자로 분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GDPR 위반 시 위반 조직에 매년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잊힐 권리(삭제권), 프로파일링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 등을 도입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GDPR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주권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내 정보가 어디로 모이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새로운 외교 전쟁

그러나 오늘날 벌어지는 데이터 주권 전쟁은 국가 간에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데이터 소유와 처리에 있어 국가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

법은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자국 내 저장을 강제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적 협조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한다. 게다가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은 데이터 암호 해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주권을 넘어 데이터 현지화로도 불린다. 강제적으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이 있다. 대체로 이들 국가는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 특히 메타(Meta), X(구 트위터), 구글 등을 사용하는 외국계 기업에게 모든 개인 데이터를 로컬, 즉 해당 국가 내에 저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의 개인정보 강화도 사실상 유럽과 미국의 디지털 주권 다툼이라 할 수 있다. 규제가 심해져 유럽의 데이터 환경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EU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13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럽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미국 정부기관이 유럽시민의 데이터를 열람하고 전송할 권한을 차단한다"는 판결을 냈다.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법안과 사건에 대해, 유럽이 자체적인 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산업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일부 사람들은 "경계를 모르는 온라인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근대적인 데이터 주권 문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잠재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를 때만 기업이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음도 명백하다. 데이터 주권이란 기술 진보, 소유, 권리에 관한 근대적 제도의 충돌이 만드는 복잡한 문제다. 